

## “한국금융의 정치경제학” 토론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진영

금융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논의가 “관치금융”이라는 틀 안에서 금융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혹은 개입이 지닌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진행되었다. 본질적으로 규제산업인 금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그간 금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과연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본 정책심포지움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본 토론자는 주제발표 1 “외환위기 이후 각 정부의 금융정책 형성 배경과 평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주제 1은 외환 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을 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을 통한 특정 산업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목적 하에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참여정부의 금융허브정책은 금융을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서 기본적인 발상은 이전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 정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후의 벤처캐피탈, 녹색금융, 기술금융은 각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전 정부의 이러한 금융정책에 본 토론자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지난 20년 간 발표자가 정리한 다양한 금융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이 과연 발전하고 변화했는지에 본 토론자는 매우 회의적이다. 본 토론자가 생각하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금융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금융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혜자에 대한 고려는 없이 top-down적으로 금융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면서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성장,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의 지속, 노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모험자본 공급 등 우리 경제에서 금융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과연 우리 금융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시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금융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금융 관련 규제를 검토

하는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본 토론자는 금융업계는 그간 정부 규제라는 틀 안에서 정부의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규제라는 방어막 안에서 지대 추구 (rent seeking)를 해왔고 그 결과 우리 금융은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금융서비스의 수혜자들이 누려야 할 혜택은 아직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신탁업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은행업계와 기업금융 관련 지급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바라는 증권업계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러한 요구가 우리 금융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며 금융서비스 수혜자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영국 금융당국을 이끈 FSA 의장 Adair Turner와 영란은행 총재 Mervyn King은 금융위기를 회고하는 저서를 최근 출간했다. 이들은 다양한 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급속한 금융의 세계화가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금융산업 종사자들에게만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현재의 은행 제도는 구조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의 만기불일치와 위험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결제 기능과 투자 기능을 분리하거나 제한하는 다소 급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심각하게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의 불완정성 하에서 금융산업의 확장과 기능의 고도화와 복잡성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달리 금융이 지닌 본질적인 역할, 그러나 우리 금융이 아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성장,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의 지속, 노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모험자본 공급 등 우리 경제에서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산적해 있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의 조치와 규제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대단한 금융정책이나 금융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회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정부가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